



▲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홀술 풍조 확산으로 수입맥주 판매량이 2016년 대비 증가했다. 2017년 이마트에 따르면 수입맥주 판매량은 2016년 동기 대비 신장률 33.1%, 취급 품목 중 매출 2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12월 26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수입맥주 코너를 둘러보는 시민.

· 화장품

2017년은 이전까지 K-뷰티를 전 세계에 알리며 승승장구했던 국내 화장품업계가 쓴맛을 본 한 해였다. 몇 년간 중국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대박'을 터뜨렸던 국내 화장품업계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7년 영업이익 7천315억원을 기록하며 2016년 대비 32.4% 감소했다. 매출액도 10% 줄어든 6조291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의 연간 실적을 기록했다. 2017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6년보다 5.6% 증가한 9천303억원, 매출액은 2.9% 늘어난 6조2천7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써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앞서며 화장품업계 1위를 했다.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 잇츠스킨을 운영하는 잇츠한불 등 중소기업 브랜드들도 사드의 영향으로 고전했다. 코스맥스의 영업이익은 2016년보다 33.2% 감소한 351억원에 머물렀으나 한국콜마는 818억원으로 2016년 대비 33.6% 증가하는 등 화장품 제조업체는 희비가 엇갈렸다.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때문에 화장품 회사들이 동남아와 미국, 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또 그동안 엄청났던 성장세가 둔화됐을 뿐이지 2017년 한국 화장품의 중국 판매는 여전히 두 자릿수인 23.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7년 11월 세 번째 '용산 시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956년 본사가 처음 설립됐고 1976년 10층 규모의 신관을 건축한 용산에 달항아리 백자를 본뜬 새로운 본사를 건립해 전사가 이전했다.

미샤 등을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의 서영필 회장은 4월 투자회사 비너스원에 1천882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양도했다. 수장이 바뀐 에이블씨엔씨는 2019년까지 총 2천289억원을 투자해 미샤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스킨케어브랜드 'AHC'로 유명한 국내 화장품 업체 '카버코리아'는 9월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인 유니레베에 22억7천만 유로(약 3조576억원)에 인수됐다. 국내 화장품업체 인수합병

(M&A)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화장품업계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올리브영, GS왓슨스, 룩스 등 헬스앤뷰티 스토어는 꾸준히 성장하며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 갔다. H&B스토어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2.5% 성장해 시장 규모 2조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표 H&B스토어 브랜드인 올리브영은 매출액이 2012년 3천85억원에서 2017년 1조1천270억원까지 뛰었다. 매장 수도 2012년 270개에서 2017년 상반기 850개로 3배가 넘게 늘었다.

10월에는 서울에서 제24차 세계화장품학회 콘퍼런스(IFSCC 2017 Seoul)가 열렸다. 세계 각국의 관계자 1천 명 이상이 참석해 한국 화장품과 기술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시켜줬다.

건설·교통

건설

■ 건설경기 동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됐던 건설경기는 2009년에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공공 수주 감소와 주택경기 침체로 2012년까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2014~2016년엔 민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6·19대책, 8·2대책, 시중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조정국면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 1분기부터 증가세를 유지하던 건설투자는 2010년 2분기 감소세로 전환해 2012년 4분기까지 11분기 연속 떨어졌다. 2013년 1분기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2014년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상승했다. 2014년 4분기에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으나 2015년 1분기부터 주택경기 호조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7년까지 12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였던 건설 수주는 2012~2013년 등락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3년 말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2014년 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2015년 1분기부터는 민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5~2016년 역대 수주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 건설업체수 현황

2017년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업이 1만2천19개사, 전문건설업이 4만9천109개사(가스·3종 및 난방 업종은 제외)로 총 6만1천128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5만8천955개사보다 약 3.7% 증가한 수치다.

자진 반납이나 등록 말소로 퇴출된 건설사는 2011년 3천570개사, 2012년 3천611개사, 2013년 4천46개사, 2014년 3천220개사, 2015년 2천668개사, 2016년 2천961개사, 2017년 2천303개사로 나타났다.

■ 국내건설 수주

통계청 경기동향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건설 수주는 140조4천억원으로 2016년 145조8천억원에 비해 3.7% 감소했다. 공종별로 보면 2016년에 비해 토목부문은 8.4% 증가했고, 건축부문은 6.9% 감소했다.

통계청 경기동향자료에 따르면 건설기성은 138조3천억원으로 2016년 120조원에 비해 15.3%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2016년에 비해 토목부문은 4.1% 감소했고, 건축부문은 23.8% 증가했다.

■ 해외건설 수주

1965년 태국 도로공사 수주로 해외건설 막이 오른 이래, 50주년을 맞이한 2016년에는 매출점유율 세계 5위를 달성하고, 2017년까지 누적 수주액 7천800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발주 물량감소, 업계의 보수적 입찰참여, 중국의 저가 수주경쟁 등에 따라 2015년부터 수주액이 지속 감소했다. 2017년 수주액은 290억 달러로 2016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동 지역이 145억8천만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50%를 차지했다. 그 뒤를 아시아 지역이 124억9천만 달러로, 아프리카 7억 달러, 북미·태평양 5억5천만 달러, 중남미 3억6천만 달러, 유럽 3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6년 주된 수주 시장인 중동 지역만 36.3%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하였다.

■ 건설업 경영분석

한국은행의 법인세 신고기업 중 비금융 영리법인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015년 5.5%에서 2016년 7.9%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영업 이익률은 2015년 3.3%에서 2016년 4.6%로 소폭 상승했고,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2015년 144.7%에서 2016년 149.8%로 소폭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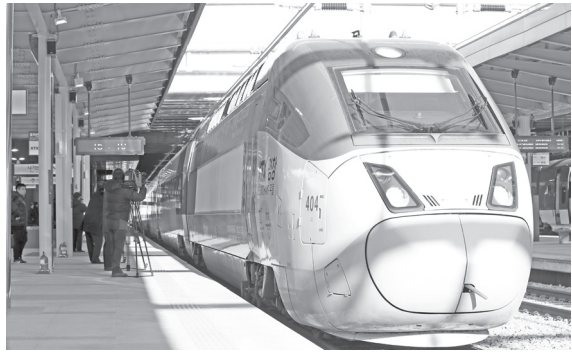
교통

■ 철도

철도 총연장은 2016년 말 현재 74개 노선 4,966.8km며 철도 복선화율은 69.6%, 전철화율은 76.4%다.

2016년 철도 이용 승객은 14억4천953만 명으로 2015년 13억 8천480만 명보다 4.7% 증가했다. 이 중 고속철도 이용 승객은 6천191만 명(KTX 6천56만 명, SRT 135만 명)으로 2015년 6천53만 명보다 2.3%, 전철 이용 승객은 13억 1천299만 명으로 2015년 11억4천39만 명보다 13.1% 늘었다.

정부는 전국 간선철도망 신설·개량, 복선전철화 등 일반철도 건설에 2조3천77억원,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 등의 건설에 702억원, 광역철도 건설에 4천67억원,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4천142억원, 철도 안전 및 운영에 1조9천878억원 등



▲ 12월 21일 오후 강원 강릉시 고동 강릉역에서 열린 원주~강릉 고속철도 개통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을 서울행 KTX 열차가 강릉역을 출발하고 있다.

총 5조1천969억원의 2018년 예산을 편성했다. 2018년에는 소사~원시 광역철도 23.2km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 도시철도

2016년 말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와 김해, 의정부, 용인에서 23개 노선 674.2km의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고 11개 노선 155.2km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서울지하철은 9개 노선 331.6km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거장은 307개, 수송 인원은 연간 26억6천338만 명이다. 2018년에는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보훈병원) 9.1km가 개통될 예정이다.

부산지하철은 1호선(노포동~신평)과 2호선(양산~장산), 3호선(수영~대저), 4호선(미남~안평) 등 4개 노선으로 구성됐다. 대구지하철은 1호선(설화명곡~안심), 2호선(문양~영남대), 3호선(칠곡경대병원~용지) 등 3개 노선으로 운영 중이다.

인천메트로는 1호선(계양~국제업무지구), 2호선(검단운류~운연) 등 2개 노선, 광주도시철도는 녹동~평동의 1개 노선, 대전도시철도는 판암~반석의 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부산~김해와 의정부, 용인에 경전철이 건설돼 있다.

■ 고속도로

2017년 말 현재 고속도로는 총 연장 4천728km로 국가도로중합계획의 2020년 목표 연장인 7천266km의 65%를 완료했다.

2018년 개통하는 고속도로는 재정사업인 부산외곽순환(신설 37.3km), 경부선 영천~연양 (확장 55km), 민자사업인 옥산~오창(신설 12.1km) 등 총 104.4km다.

2018년 착공하는 고속도로는 재정사업인 새만금~전주(신설 54.1km), 김포~파주(신설 25.5km)와 민자사업인 광명~서울(신설 20.2km), 포천~화도(신설 28.9km), 평택~부여~익산(신설 138.3km) 등 6개 구간 총 267km다.

■ 국도

2017년 말 현재 국도 총연장은 1만3천977km며, 2017년 한 해 동안 성남~장호원 등 44개 구간 총 383.3km가 확장 및 신설

개통됐다. 2018년에는 국도 소천~도계2 등 총 41개 구간의 국도가 신설 및 확장되고 소양~진안 등 11개 94.3km 구간이 착공된다.

광역도로 2개 구간(산성터널 등 지자체 국지도 9개, 혼합도로 2개)과 지자체 도로(고령~성주 등 국지도 3개, 혼합도로 6개, 광역도로 3개)의 개통으로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자동차

2017년 말 현재 전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모두 2천252만8천295대로 집계됐다. 국민 2.29명당 자동차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천803만5천 대로 80.1%를 차지해 가장 많고 승합차 86만7천 대(3.9%), 화물차 354만 대(15.7%), 특수차 8만6천 대(0.4%)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자가용 2천98만4천 대(93.1%), 영업용 145만8천 대(6.5%), 관용 8만6천 대(0.4%)다. 자가용 승용차만 떼어놓고 보면 1천712만2천 대로 전체 자동차의 7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538만6천 대(23.9%), 서울 311만6천 대(13.8%), 경남 166만8천 대(7.4%)의 순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1천1만3천 대로 전체의 44.4%를 차지했다.

2017년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184만5천329대로 전년도의 183만6천 대보다 9천480대(0.5%) 증가했다. 국산차는 6천927대(0.4%)가 증가한 반면 수입차는 240대(0.1%) 줄었다. 2017년 말 기준 수입차 총 등록 대수는 189만6천689대로 전체 등록 자동차의 8.4%를 차지했다.

■ 항공

전국의 공항은 모두 15곳으로 국제공항은 인천, 김포, 제주, 김해, 대구, 청주, 양양, 무안 등 8곳이고 국내선만 운항하는 공항은 광주, 사천, 울산, 여수, 포항, 군산, 원주 등 7곳이다.

2017년 항공여객은 여행 수요 증가,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보유 증대와 신규 노선 취항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돼 역대 최대인 1억936만 명을 기록하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1억 명을 돌파했다. 국제선 여객은 2016년 대비 5.4% 증가한 7천696만 명, 국내선 여객은 2016년 대비 4.8% 증가한 3천241만 명을 기록했다.

항공화물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IT품목 수출입물동량, 특수화물, 전자상거래 물량, 수하물 등의 증가로 2016년 대비 6.1% 상승하면서 432만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 저비용항공사(LCC) 급성장

2017년엔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급성장했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과 신설된 에어서울 등 국적 LCC 6개사는 항공기 도입을 늘리고 운항노선 다변화에 나섰다.

2017년 LCC들은 전년 대비 21.6% 증가한 3천873만 명의 항공여객을 수송했다. 이 중 국내선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1천

843만 명을, 국제선은 전년 대비 41.9% 증가한 2천30만 명을 각각 수송했다.

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이 국제선에서 차지하는 비중(국제선 분담률)은 2016년 19.6%에서 2017년 26.4%로 6.8%포인트 증가했다. 국내선에서 저비용항공사들의 분담률은 56.9%를 기록했다.

■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완공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관문공항으로서 2001년 3월 개항 이래 이용객이 연평균 7.5%씩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 6월 탑승동과 제3활주로를 증설하는 2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했다. 2009년 6월부터는 제2여객터미널과 제2교통센터 및 연결교통,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는 3단계 건설 사업에 착수해 2017년 12월 완공했다.

3단계 건설 기간 중 7만천 개의 일자리와 9조4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되며, 제2여객터미널 운영으로 일자리도 약 8천500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인천국제공항은 2개 여객터미널 운영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연간 7천200만 명의 여객과 50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의 명실상부한 허브공항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월 21일 오후 개항 준비가 한창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방문, 자동출입국심사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 제주 성산에 제2공항 건설 추진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을 신산리·온평리·난산리·고성리 일대 4.9km²(150만 평)에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됐다. 정부는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2025년에 개항, 2개 공항 체제를 갖추겠다고 2015년 11월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기존 공항 확장 ▲신공항으로 이전하고 기존 공항 폐쇄 ▲기존 공항을 운영하면서 제2공항 건설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제2공항 건설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KDI), B/C 1.23, AHP 0.664로 경제성(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비는 4조8천7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주민소통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계획대로 2025년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

정부는 그동안 영남권 지역의 최대 현안이던 영남권 신공항 최종 입지를 2016년 6월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정해 발표했다. 미래 항공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3천800만 명 규모의 여객 처리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철도, 도로 등 접근 교통망을 확충해 공항 접근 시간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KDI), B/C 0.94, AHP 0.507로 경제성(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사업비는 5조9천6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2017년 8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후속절차 시행과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 드론

정부는 드론산업 성장에 맞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농업, 촬영 등으로 한정된 드론 사용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형 드론 사용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비행승인 및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12~25kg)하고, 6개월 단위의 장기 비행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2017년에는 아간·비가시권 비행 특별승인을 도입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하는 한편,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및 기반조성 등으로 2017년 국내 드론 산업은 2016년 대비 ▲장치신고 대수 2,171→3,849대 ▲사용사업 업체 수 1천30→1천501개 ▲조종자격 취득자 1천326→4천254명으로 크게 성장했다.

정부는 드론 시장의 확대를 위해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 수요 3천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마음 놓고 개발·시험할 수 있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2곳을 추가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하는 한편, 5G와 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규제 완화, 재정 지원을 통해 상용화 사례를 창출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부동산

■ 부동산 정책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축을 위해 다양하고 강력한 규제가 도입됐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거의 공공성 확보를 위

한 제도적 조치도 이전 정부와 달리 크게 강화됐다.

5월 9일 대선 이후 주택시장은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미국 기준금리의 완만한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며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적 시장 안정화 조치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6월 19일 마련했다. 2016년 11.3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부산진구로 확대했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역은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수 제한을 비롯해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청약제도가 도입됐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거래행위 현장 점검 등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국지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투기수요 유입과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자극 등 주택시장 불안 우려는 점점 커졌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이 마련됐다. 먼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그중에서도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소득세를 증가하는 한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2018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키로 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대폭 정비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에도 전매제한을 두는 등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이고 금융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서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확충과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신규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2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선보였다. 11월 29일 발표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에 초점을 두고 공적 주택 100만 호 공급이라는 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계층별 소득수준에 따른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년층에 대해서는 5년간 3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청년우대형 통장 도입과 전월세 대출금액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공공임대 20만 호 공급,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확대, 전용 대출상품 출시 등 특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고령 가구에 대해서는 무장애 설계를 도입한 임대주택 3만 호 등 공공임대 5만 호를 공급하고 연금형 매입임대 등을 통해